

2025년 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함께
6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대주제 "노동조합과 노동운동론"

3회 "민주주의와노동" 1박2일 캠프

‘민주노조운동’의 전망과 미래를 어떻게 그려낼 것인가?

1주제:민주노총 30년, 민주노조운동은 어떤 노조운동이
었는가?

2주제:민주노조운동의 길을 어떻게 열어야 하는가?

일시: 2025년 11월 29일(토) 오후6시-30일(일) 오전10시

장소: 서울 마리스타 교육원 (서울 마포구 토정로2길 37)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주관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발제>

- 기조 발언 (좌장):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학교 강사/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 패널 발제:
도명화 (민주연합노조 부위원장, 톨게이트노조 전지부장)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노조 지회장)
박승하 (택배노조)
- 특별 발제:
노동청년들의 제안 "노동운동, 문화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순서>

- 2025. 11.29. 오후5시-7시: 캠프 입소 등록 및 석식
- 2025. 11.29. 오후7시- 10시 30분: 캠프 토론회
짧고 굵직한 문제제기적 발제, 치열한 ‘토론’과 잠정 결론 짓기
- 2025. 11.29. 오후10시 30분-12시: 조별 토론 뒤풀이
- 2025.11.30(일) 오전9시: 총화토론 및 해산

[기조 발언]

한국 노조운동의 진단과 미래 전망 - 계급적 노조운동의 가능성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오늘날 체 게바라의 이야기만큼이나 일제하 평양 고무공장 노동자로 을밀대 위에서 고공농성을 감행한 강주룡은 화제로, 소설로, 연극으로까지 다뤄지고 있지만, 그가 평양의 '적색노조'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은 놓칩니다. 전두환정권 시절 서울 구로공단에서 일어난 1985년 구로동맹파업도 학출 위장취업자들과 선진노동자들의 준비된 파업이 아닌, 자연발생적인 노동자 파업의 분출이었다고 쉽게 규정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번 학교에서 염두에 두는 노조는 아마 일제하에서라면 '적색노조'라 불렸겠죠. 당시 적색노조, 적색농조로 불리던 대중조직이 있습니다. 엄혹했던 일제치하에서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운동활동가들은 공장을 넘어 농업노동자들까지 노조로 조직하였습니다. 지금 한국의 노조는 질적으로 무엇이라고 분류할 수 있을까요? 이렇듯 노동조합의 유형과 성격은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변화해왔습니다. 자본주의의 다양성 만큼이나, 노조의 모델과 유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고정태가 아니며 변화해왔고, 앞으로도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특히 한국의 노조운동과 노동운동이 후퇴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지금 좌파든 노동이든간에, 계급도 잊고 운동성도 퇴보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 명확합니다. 그에 맞춰 노동조합론이나 노동운동론 역시 그만큼 흔탁해질대로 흔탁해진 주제가 됐습니다. 현재 노동조합론 강의는 대부분 실무 교육에 치중합니다. 운동론이 아닙니다.

노동조합 이론에서 노동조합의 역사적인 성격, 노조의 기원과 변화과정, 국가마다 다양성, 노조 유형의 다양성등에 대한 논의는 축소됩니다. 노동조합을 '계급형성'과 연결하는 계급적인 시각은 아예 단절되고 있습니다. 계급형성의 시각이 단절되면, 사회적 계급내 계급간 동맹에 대한 문제의식도, 자본주의 철폐의 가능성도 사라집니다. 자본주의는 이런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노동조합론은 언제나 똑같지 않고 무엇이나 다 뻥하지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단지 노동조합론이 아니라 어떤 노동조합론이냐입니다. 이번 학교 강의는 노동조합론에서도 '계급적 노동조합운동'론의 시각에서 강의하고 이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진단을 거쳐, 이를 향해 한발이라도 더 나아가는 문제의식과 방향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민주노총 30년입니다.

우리가 6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4강을 여는 시간, 민주노총은 발족 30주년을 맞아, 자체적으로 다양한 평가 토론회를 열고 있습니다. 과연 그 평가는 자화자찬 이상의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자기 연민과 위로 이상의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30년의 역사를 자기반성과 상호반성 속에서 돌아볼 수 있을까요? 되돌아보고, 역사라는 ‘기억의 우물’에서 무엇을 길어 올리고, 역사라는 ‘기억의 전투의 장’에서 어떻게 계급적 주체를 일으켜 세울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민주노총의 30년 역사를 더욱 자기비판적으로 바라봐야합니다. 더욱 객관적으로 바라봐야합니다. 자기 혐오와 자기 폄훼도 문제이지만, 자기 연민과 자화자찬으로 도배질하기에는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민주노조운동은 한편으로 제도적인 포섭,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적인 배제의 공간으로 스스로 자신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노조혐오와 ‘좌파 절멸’로 특징지어진 한국사회가 민주화이행이후에도 여전히 만들어내는 질곡 속에서 노조에 대한 낭만화, 신화화가 강력하지만, 우리는 노조에 대한 낭만적인 신화를 넘어서서 계급적 노조운동의 상을 봐야합니다.

1987년 6월항쟁이라는 ‘민주화 이행’에 노동계급은 준비되어있지 않았습니니다. 조직화되어있지 않았습니니다. 자본주의와 독재에 맞서는 자신의 이념과 이론으로 무장된 선진적인 부대도 강력하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니다. 단지 70년대 자생적인 노동자투쟁이 남긴 ‘민주노조’의 기억과 80년대 변혁운동과의 ‘조우’를 통해서, 계급적 노조운동의 초보적인 걸음을 단지 시작하였을 뿐입니다. 군부쿠데타이후 들어선 전두환 정권에 의해 학생운동 및 좌파들과 더불어 가장 탄압받으면서 궤멸되다시피했던 자생적 ‘민주노조’들이 1984년 청계피복노조의 복구투쟁을 시발점으로 꿈틀대면서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고, 전국 각지에는 학출 위장취업자들이 ‘노동계급 속으로’ 들어가 변혁의 사상으로 노동계급을 조직화하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1985년 구로동맹파업이라는 ‘지역적 정치파업’이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 영남지역 노동벨트로부터 ‘노동자대투쟁’의 봉화가 올려졌고 위로 복상하여 전국에서 노조민주화 투쟁이 확산하였습니다. 7월8일 울산의 현대정공의 파업에서 시작하여 현대자동차, 현대미포조선등으로부터 확대된 지역의 ‘불법’ 자생적인 파업은, 부산 구미 창원등 남부를 거쳐 복상하면서 서울 경기권으로 확산되었고, 이 과정에서 2500여개의 ‘민주노조’ 혹은 ‘민주화된 노조’가 탄생하였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화이행이 정치 엘리트간에 ‘6.29선언’이라는 이름의, 좁고 협소한 이행방식인 ‘거래 (deal)에 의한 이행’으로 정리되려는 순간 7,8,9월 3개월간 지속된 ‘노동자대투쟁’은 자유주의적 민주화의 경로에 계급적인 색채를 흘렷했습니다. 이후 민주화의 경로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1991년 전노협의 발족이었고 이어 1995년 민주노총의 발족입니다. 이때 등장한 노조들과 내셔널센터를 두고 우리는 ‘민주노조운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노동계급운동은 민주화의 경로를 바꾸는데 얼마나 기여하였습니까? 자유주의적 정치민주화를 사회적인 민주화로, 급진적이고 좀더 평등지향적인 민주화로, 나아가 자본주의 철폐를 향한 민주화로 만들었습니까? 노동계급의 단계로 노동계급의 경제적인 차이들을 얼마나 해소했습니까? 조직화된

노동계급은 얼마나 민중의 호민관으로, 사회적 동맹을 구축하면서 이 사회의 변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흔히 한국의 독립노조운동을 ‘민주노조운동’이라고 이름 부릅니다. 민주노조라고 부르고 그 노조들의 총화인 내셔널 센터는 민주노총이라고 불립니다. 산하 산별들 업종들도 ‘민주’라는 이름으로 ‘어용노조’인 한국노총과 구분짓습니다. 이제는 그 호칭을 당연한 듯이 여깁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민주노조는 역사적인 이름입니다. 역사 속에서 즉 맥락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전통이지만 동시에 넘어서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민주노조운동에 붙는 ‘민주’는 노조운동의 질과 미래, 전망을 제한하는 족쇄가 될 수도 있고, 자기 변화와 혁신을 향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1995년 창립한 민주노총의 과제는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 전투성에 기초하여 변혁성을 실현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민주노총 스스로 내세우는 핵심적인 ‘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주성, 전투성, 변혁성은 병렬이 아닙니다. 이것은 3자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자주성, 전투성, 변혁성에 필요한 것이 바로 ‘민주성’입니다.

민주노조운동에서 민주노총에서 그 민주성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조합 민주주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노조운동’에 있어서 ‘민주’의 의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될 때에만 민주노조의 민주성은 자주성, 전투성, 변혁성을 잊지 않을 것이고, 그 3자의 공고한 결합에 대한 일종의 존재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실천해야만 민주노조운동이 87년 체제의 ‘민주’와 구분되는, 그것을 넘어서는, 자유주의로부터 독립한, 독자적인 계급적 노조운동과 계급정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자유주의 liberalism이상으로 보지 않는 87년 체제에서, 민주노조운동은 다른 민주주의를 꿈꾸고 외치고 실현해야 할 과제를 숙명처럼 안게 되었습니다. 그 호칭은 바로 그런 복합적이고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지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계급적’ 관점, 노조운동이란 이름 앞에 ‘계급적’이란 수식어를 붙이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노동을 계급형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고민하는 것, 계급적 노조운동을 지향하는 노조의 활동과 투쟁과 운동을 여하히 시도하고 실천하는 것이 기본 시각과 자세로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노조운동의 미래와 전망을 지금과 다른 방향으로 틀어내는 ‘자기 혁신’과 전환의 열쇠일 것입니다. 민주노조운동의 ‘민주’를 급진화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제 계급적 노조운동은 실천은 물론이고 뇌 속에서 사라진지 오래된 전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주류적인 시각과 실천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상투적인 노조 활동과 개념에 찌들대로 찌들어 핑계만 찾는 뇌와 몸에 새로운 노동조합에 대한 시각으로 각성의 시작을 열길 바랍니다.

민주노조운동이 계급적 노조운동의 가능성으로 한발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계급적 노조운동의 미래속에서 노동계급의 해방, 민중의 해방 세상을 전망으로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패널 발제1]

나에게 민주노조는 힘이다

도명화 (민주연합노조 부위원장, 톨게이트노조 전지부장)

“힘”?

얼마전 수련회 토론에서 내가 민주노총을 가입한 이유를 키워드로 쓰라고 했다. 가장 많은 단어는 “힘”이었다. 그 힘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였지만 강인한 이미지만큼의 힘에 대한 기대감과 나의 나약함에 힘을 줄 것 같다는 의견도 많았다. 그리고 그 민주노총의 힘이 나의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의견도 있었다. 결국은 민주노총은 대단한 힘을 가진 조직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나는 “치사뻘스”라는 단어를 적었다. 너무 더럽고 치사해서 노동조합을 시작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민주노총의 힘이 부담스러워서 한국노총을 선택했지만 크게 깨달음을 얻고 민주노총으로 오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말한다. 노동조합을 할거면 힘있는 노동조합으로, 이왕 할거면 앞장서서 하자고...그 힘이라는건 투쟁속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강인함을 거부했던 내가 다시 강인함을...

결혼을 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 출산과 돌봄으로 나의 직장경력도 단절되었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하기에는 내 자존감이 바닥을 쳤다. 단순하게 우리 엄마에게 용돈이라도 내 맘대로 주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톨게이트로 재취업을 했다. 결혼 10년만의 직장이었다. 다소 어리둥절하였지만 직장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좋았고 생활비의 폭이 넓어지는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좋았다.

회사생활은 나에게도 또다른 행복이었다. 일도 재미있었고 나름 만족도도 높았다. 3교대 근무이다보니 체감상 느껴지는 급여가 적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12년을 다니면서 단 하루도 출근하기 싫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렇다고 출근을 하고 싶다 정도는 아니었음)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일하는 동료들간의 이간질로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될 지경에 이르렀고, 끊임없는 성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반항은 커녕 무기력하게 받아들이기를 넘어서, 하나의 권력처럼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만들어진 노동조합이 한국노총이었다.

앞에 이름을 떠나 노동조합은 무조건 필요하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가장 평화로우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준 시기가 한국노총을 가입하고 딱 1년동안이었다. 여태까지의 우리는 노예나 다름이 없었다. 체감상 많다고 느낀 월급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고 교육이든 술자리든 수시로 불려다녔던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많은 것을 바꾸었고 그렇게 갈라져 있던 동료들이 하나가 되었다. 아...노동조합이 이런거구나...

그렇게 좋았던 노동조합은 업체가 바뀌면서 나는 해고가 되었고 우리 조합원들은 핍박과 탄압을 받았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파업이었다. 이미 그때 한국노총은 우리를 포기했다. 파업은 하되 투쟁은 하지마라, 천막도 안된다, 선전전도 하지마라, 엠프도 틀지마라..등등 말도 안되는 지시를 계속하는 한국노총과 갈등은 깊어졌고 한국노총에서 우리의 성향은 민주노총인 것 같다는 말을 하며 은근히 알아서 나가주기를 비추었다.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고 어찌되었든 투쟁을 이어가고 싶었다. 많은 고민과 논의를 거쳐 민주노총의 문을 두드렸다. 이미 해고가 되었고 그것도 파업중인 우리를 받아주는 조직이 없을 거란 두려움에 한달치의 조합비를 미리 건어서 챙기고 파업투쟁중인 우리의 영상을 만들어 의정부에 있던 민주연합노조를 찾아갔다. 나를 알아보니 민자고속도로지만 톨게이트 관련 직종의 조합원들이 이미 가입되어 있었고 민주노총안에 복수노조를 피하겠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찾아간 우리는 바지가랑이를 붙잡고서라도 꼭 가입을 허락받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갔다. 즉답을 받지는 못했지만 중집을 거쳐 오래지 않아 가입을 할수있게 되었다.

스며드는 민주노총, 연대의 힘

두렵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우리는 민주노총으로 올수가 있었다. 녹색 조끼를 받던 그 날을 잊을 수가 없다. 얼마나 입고 싶었던 민주노총 조끼였던가...그 조끼를 입고 회사를 탐돌이 하듯이 돌던 우리는 다시 활기를 찾았고 지치지 않도록 연대해주는 동지들을 보며 힘을 잃지 않았다. 그 힘으로 해고 투쟁도 이어갈 수 있었고 긴 시간이었지만 4년만에 복직도 하였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2019년 톨게이트 직접고용 투쟁도 할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나는 더럽고 치사해서 시작했던 노동조합이었지만 민주노총의 힘으로 지금의 나는 만들어진 듯 하다.

누군가가 말하였다. 투쟁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연대는 모두가 살기 위해서 한다고 했다. 투쟁을 하는 것도 엄청난 힘이 필요하지만 연대는 그 힘이 모여 더 큰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우리는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연대하고 그 승리는 우리의 승리로 만들어낸다. 가장 이상적인 민주노조는 이런 모양이 아닐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져본다.

지부를 떠나 중앙임원을 하면서 느끼는 바가 많다. 고치기보다 내가 먼저 포기해버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계속 따라다닌다. 민주노총에 절박한 마음으로 가입하고 투쟁을 했었다. 투쟁이 잠시 설 때는 교육을 받으러 다녔다. 마흔을 훌쩍 넘어서 알게 된 노동조합이었지만 나에게게는 신세계였다. 의심도 많아서 종교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 내가 민주노총에 스며들 듯이 빠져들었다. 분노로 시작한 노동조합이었지만 이분노를 이어가고 싶었고 많은 것이 궁금하고 알고 싶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교육이었고 분야를 가리지 않고 기회가 된다면 무조건 들었다. 교육을 들으면서 현장실천도 함께 했다. 받은 연대가 많았고 함께 해준 동지들이 많았기에 값는다는 생각으로 다녔다. 그러면서 또 배움이 있었다. 항상 배움의 자세를 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노력하지 않는 힘은 없다.

그걸 노력이라고 말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 주위에는 이런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 간부들이 많다. 조합원까지는 바라지도 않겠다. 적어도 노동조합의 간부들은 조합원과는 달라야한다고 생각한다. 간부가 교육이든 회의이든 무엇 하나도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조합원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겠는가. 꼭 간부만이 하라는건 아니다. 조합원 중에서도 어떠한 노력이라

도 하는 사람이 나는 간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부가 1년의 농사라는 임금교섭에만 매몰되어 있고 다른 사안에는 의무적 참여 또는 할수 없이 억지로 하는 활동에 무슨 배움이 있고 발전이 있을수 있겠는가? 사업장의 답을 못 넘는게 아니라 안 넘으려고 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든다.

어딜 가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정설은 어디에서도 통하는 듯하다. 명분도 근거도 없지만 내가 노동조합을 오래하고 목소리가 크면 모두 거기에 동의를 한다. 정말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싸우기도 지쳐서 내가 스스로 내 목소리를 죽이고 있다. 민주노조 사수를 수시로 외치는 우리지만 과연 이것이 민주적인 것인가?

우리는 민주노총이라는 민주노총 안에서 우리만의 세상에 갇혀 사는 것 같다. 우리들만의 언어로 대화하고 우리들만의 생존방법은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탄핵 광장이 열리면서 젊은 청년세대들을 접할 기회가 많이 생겼다. 준비되지 않은 우리는 그저 그들이 불편하다고 말한다. 기성세대 중심의 노조는 이제 세대교체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듯 하다.

사업장에서 해고가 되거나 탄압에 지쳐 죽을 때쯤 찾게 민주노총이었다. 나 또한 그랬었고 내 주위에서도 그런 동지들을 많이 봐왔다. 분명 아직까지도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요즘의 젊은 세대는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노동조합을 선택한다. 단지 나처럼 강인한 힘이 무서워서 한국노총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탄핵광장에서 길을 열겠다는 민주노총을 엄청 환호했지만 과연 그 길이 어떤길인지에 따라 선택지는 달라질 것이다. 고민하고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힘을 많이 잃은듯하다. 노력하지 않는 민주노조사수는 이미 갈길을 잃은 메아리일 뿐이다.

우리는 민주노총 조합원이다.

그 힘은 조합원들에게 분명하게 각인되어 있다. 나 또한 그 힘으로 싸울수 있었고 이길수 있었다. 하지만 그 힘은 이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에서 나온다. 항상 학습하고, 그리고 실천속에서 그 힘은 분명 나온다고 생각한다. 몇몇의 간부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고민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조합원들의 의무도 당연 중요하지만 권리도 제대로 알고 행사해야만 발전하는 민주노조가 되지 않을까 싶다.

딱딱한 우리의 문화도 어렵고 거부감이 든다. 매일매일이 무거운 분위기에, 내가 놀려 죽을것만 같다. 사안이 항상 무겁다보니 너무 가벼워짐이 조심스럽겠지만 쓸데없이 너무 무거운 감도 있다. 대중이 공감되지 않는 문화에 누가 쉽게 접근하겠는가.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가 즐기고 있음을 느꼈으면 좋겠다.

나는 민주노총에 대한 애정이 엄청난 사람중에 한사람이다. 어렵게 들어왔고 보고 배운것도 많으며 내 삶이 완전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망스러움이 자꾸 생기지만 그 또한 그럼 나는 무엇을 노력하였는가를 먼저 생각해본다. 민주노총에 대한 자부심과 민주노총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다. 먼저 시작하는 우리가 민주노총 조합원이다.

[패널 발제2]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전망과 미래를 어떻게 그려낼 것인가?

이상규(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회장)

- 민주노총 30년, 민주노조운동은 어떤 노조/운동이었는가?
- 민주노조운동의 길을 어떻게 열어야 하는가?

1. 민주노총의 출발 :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만들어낸 전투적 노동운동

민주노총은 1995년 창립 당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노동자 권리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투적·민주적·계급적 노동운동의 상징이었습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고 기업별이 아닌 산별노조 체계로의 전환이 과제로 제기되었으며 민주주의, 조합원 참여, 투쟁 중심성이라는 명확한 방향성이 존재했습니다.

초기 민주노조운동의 특징

- ① 조직은 작았지만 현장 투쟁력은 강했다.
사업장별로 강력한 현장 활동가들이 있었고, 노동자 스스로 조직을 운영하려는 힘이 컸습니다.
- ② 계급적 의제를 앞세웠다.
임금·단체협약을 넘어서, 정리해고 반대,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비정규직 철폐, 한미FTA 반대 등 사회적 의제에서 선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 ③ 정부·자본에 맞서는 힘이 민주노총의 정당성을 만들었다.
민주노총 존재 자체가 노동과 민주주의의 전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성은 시간이 지나며 사회 구조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채 과거 방식에 머무는 경직성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2. 노동환경의 변화 -민주노총이 넘지 못한 구조적 과제들

지난 30년 동안 노동자 현실은 1987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 ① 비정규직의 폭발적 증가 : 1995년 27% 수준이던 비정규직이 2020년대에는 절반에 육박.

- ② 대기업·공공부문은 외주화가 기본 구조가 되었고, 노조가 없는 노동시장이 압도적 다수가 되었습니다.
- ③ 원·하청 구조의 고착 : 재벌·대기업은 책임을 하청과 협력업체에 떠넘기고, 실질적 교섭권은 원청이 쥐고 있으나 법은 이를 규율하지 못했습니다.
- ④ 플랫폼·특수고용·이주노동자의 등장 : 새로운 형태의 노동은 노조법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민주노총의 조직 방식은 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 ⑤ 교섭 구조가 복잡해지고 파편화됨 : 기업별 교섭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실 속에서 '산별교섭 → 산업구조 개혁'이라는 민주노총의 장기 전략은 사실상 절반도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3. 민주노총의 대응 : 성과와 실패가 동시에 존재

민주노총은 지난 30년간 중요한 성과를 남겼지만, 동시에 구조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측면도 분명합니다.

(1) 성과

- ① 노동권 후퇴에 대한 마지막 방파제 역할
ILO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일부 개정 등 노동권 후퇴를 막는 데 민주노총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 ②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판결, 톨게이트 투쟁, 학교비정규직 운동 등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 ③ 산별노조 구조의 기본 틀을 구축
금속·공공부문 등 일부에서 산별교섭의 싹을 틔웠고 산별 전환이라는 큰 방향성은 분명한 성과입니다.

(2) 한계

- ① '기업별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함
산별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기업별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대공장 정규직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고착되었고,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② 투쟁 방식의 정형화
초기 투쟁력은 강점이었지만 총파업 선언 → 동력 부족 → 철회 이 패턴이 반복되며 사회적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 ③ 새로운 조직화 전략의 부재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여성·돌봄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 조직화 전략이 부족했습니다.
조직률은 14%, 사실상 정체 상태입니다.
- ④ 정파 중심 정치가 현장 민주주의를 약화
정파 갈등은 조합원들의 정서와는 멀어졌고 의사결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커졌습니다.

다.

4. 민주노조운동의 내적 문제-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넘지 못한 벽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민주노조운동의 내적 구조에 있습니다.

① “조합원 민주주의”의 형식화

대의원대회 중심, 복잡한 규약 구조, 현장 토론문화의 약화, 조합원의 요구보다 정파의 입장이 앞서는 구조.

이 모든 것은 민주노동운동의 생명인 현장 조합원의 참여력·주도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② 정규직 중심성의 강화

민주노총의 주요 의사결정이 조직 규모가 크고 투쟁력이 강한 단위에 의해 좌우되다 보니, 비정규직, 하청·사내하청, 플랫폼 노동자, 여성·돌봄 노동자, 이주노동자는 주변부로 밀려났습니다.

③ 사회적 연대의 약화

90~2000년대 민주노총은 시민사회와 함께 사회적 개혁의 주도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민사회와의 거리가 커지고 노동 문제를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장하는 능력이 약화되었습니다.

5. 그럼에도 민주노조운동은 왜 필요한가

2020년대 한국 사회는 양극화, 비정규직 확대, 주거·교육·돌봄 위기, 청년세대의 불안정 노동, 플랫폼 노동 구조속에서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가 더 필요해졌습니다.

민주노조운동은 여전히 한국 사회의 ‘마지막 안전망’이며 노동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조직입니다. 그러나 이 역할을 유지하려면 조직·전략·의사결정·교섭구조 전부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6. 앞으로의 민주노조운동이 가야 할 길

이제 민주노총도, 민주노조운동도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① ‘전체 노동자 대표성’ 회복: 조직화 중심 전략으로 전환

플랫폼 노동자, 하청·사내하청, 특수고용, 여성·돌봄노동자, 청년·이주노동자

이들을 대규모로 조직화할 전문 조직화팀, 지역별 노동자센터, 법률·상담·교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② 원청 사용자 책임을 중심으로 한 교섭구조 개혁

민주노조운동의 핵심 전략은 교섭권 재편입니다.

원청의 법적 사용자성 확대, 산별교섭의 의무화, 공공부문 표준임금제, 민간 대기업의 공급망

책임제 도입등 민주노총이 법 개정 + 현장투쟁 + 사회적 압력을 결합한 전략으로 교섭구조를 바꿀 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③ 조합원 민주주의의 재건

조합원 참여 확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의사결정, 정파 중심 구조의 투명화, 현장 토론 활성화 등

민주노총의 생명은 현장과 조합원입니다. 그 민주주의가 살아나야 조직 전체가 살아납니다.

④ 시민사회와의 연대 복원

노동만의 문제로 남으면 민주노총은 고립됩니다.

주거, 교육, 돌봄, 기후 위기 등 사회적 의제에 민주노총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30년 전 민주노총이 사회개혁의 중심이었듯 다시 사회의 개혁 동력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⑤ 투쟁·정책·조직화의 삼각 전략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투쟁, 조직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투쟁이 실패하는 이유는 투쟁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투쟁이 정책·조직화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7. 민주노총 30년, 이제 다시 출발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30년은 성과도 컸고 한계도 분명하며 지금은 기로에 선 시기입니다.

민주노조운동이 정규직 중심을 넘어 전체 노동자 대표성을 갖는 운동, 투쟁과 정책이 결합된 전략적 조직, 시민사회와 함께 사회개혁을 이끄는 대중운동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과 같은 민주노총으로 존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노총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노조운동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더 강력한 자기혁신을 선택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30년, 이제는 새로운 민주노조운동의 30년을 준비할 때입니다. 그 출발점에 우리가 함께 서 있습니다.

[패널 발제3]

민주노조운동의 길을 어떻게 열어야 하는가?

박승하 (택배노조)

민주노총이 길을 열겠습니다 & 라는 구호는 윤석열 퇴진정국에 총연맹이 부여잡던 구호였음. 그러나 윤석열 퇴진 이후 조기대선과 그 이후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길을 열어냈는가? 아니, 민주노조 운동의 길을 열어내고 있는가? 길을 열겠다는 선언적 구호를 넘어 민주노조운동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임. 노동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이제 만 2년 차 밖에 안된 새내기가 이러한 거창한 주제를 다룬다는 것이 여간 힘든것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운동의 원칙과 기준이 확고하기에 그간 겪어온 흐름 안에서 느끼는 답답함과 고민거리를 함께 나눠보려고 함.

문제제기

대중성과 계급성

민주노조 운동은 대중운동의 흐름 안에서 그에 상응하는 기반을 갖춰야 하기도 하지만, 계급운동이라는 노동 본연의 모습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함. 그러나 최근 총연맹 주도로 이뤄진 일련의 투쟁들은 과연 '계급운동'에 충실한가에 대해 의문이 들고, 오히려 대중운동에만 지나치게 치중해 계급운동 본질을 잊은듯 한 모습이 보여짐. 반면 대중운동에만 치중했음에도 민주노조 운동은 윤석열 퇴진 광장 전후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포섭하지 못했고, 이를 조직화하는 전술과 전략이 미비했음. 윤석열 퇴진정국과 조기대선까지 이어지는 투쟁정국에서 민주노총이 '길'을 열겠다는 선언적인 구호 외에 어떤 중심적 역할을 했는지 또한 의문. 특히 고공농성자들이 마지막 힘까지 짜내서 투쟁하고 있는 와중에 누구의 이미지를 위한 것이었는지 모를 루프탑 파티로 드러난 천박함은 계급적이지도, 대중적이지도 않았음. 과연 민주노총이 길을 열었는지, 그리고 민주노조 운동의 길을 열어내고 있는지, 본질을 잊은 것은 아닌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지점.

당사자와 연대시민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진행하던 한 늙은 목사의 농성을, '매년 이맘때 건강단식을 한다'는 등 폄훼하며 연대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못한 현 위원장의 발언을 목도하면서 당사자와 연대시민의 간극을 느낌. 물론 당사자가 본인이 당면한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밖에 없고 해결의 가장 핵심적인 주체이기에, 운동의 측면에서 그리고 그 외 어떤 측면에서도 당사자의 목소리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존재함. 그러나 당사자만이 당사자의 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는 주장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메신저에 주목하게 돼 정작 메시지를 놓치는 상황에 놓임. 그렇기에 우리는 당사자주의를 넘어선 운동을 고민해야 하고 &당사자성&의 바탕에서 당사자-비당사자 이분법을 극복해야 함. 당사자주의를 넘어서지 않는 않는 이상, 연대시민, 광장의 대중을 포섭할 수 없을 것임.

전선의 부재

최근 쿠팡의 살인적인 새벽배송에 맞선 투쟁에, 자본을 위시한 일부 경제지의 프레임으로 논란이 일자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겠다'며 '민주노총은 새벽배송을 거부하지 않습니다'라는 전선을 설정했음. 쿠팡의 김범석의 말대로 '쿠팡 없는 삶을 상상하지 않게' 된 지금, 노동자들의 죽음들이 지탱해 온 사회구조, 그 죽음들이 켜켜이 쌓은 자본의 프로세스를 뒤엎는 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민주노총이 설정한 전선은 투쟁의 기초 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계급운동의 본질을 거스르고 있는 듯 한 느낌을 지울 수 없음. 후퇴된 전선을 되살린(?) 것은 민주노조운동이기보다, 오히려 최근 한달간 네다섯명의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으로부터 일어난 여론의 환기에 의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음. 그제서야 새벽배송을 '거부'한다는 입장(11.26 총연맹 성명)이 나오는 상황을 보며 전선의 부재를 확실하게 느낌

이에 반해 사회를 멈춰온 장애인운동의 관점은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음. 장애인운동의 한 활동가는 본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분명한 전선을 설정하는 뚜렷한 관점에 귀를 기울여야 함

장애인운동은 정상성에 기반을 둔 시간-속도가 아닌 장애인의 신체성 및 시간성을 이 사회에 각인시킴으로서 그 속도를 늦추는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경쟁과 효율성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시공간에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파열음을 낼 수밖에 없겠지만, 아마도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듯, 과속은 늘 위험하므로.

위 문장은 사회구조를 바꿔내는 운동적 차원에서, 그리고 길을 열겠다는 구호에 걸맞는 문장으로 보임. 노동도 멈출 수 있는, 늦출 수 있는 운동이 돼야 하고, 특히 사회와 산업을 멈출 수 있는 깡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정치방침과 분열

많은 동지들이 이야기 했듯이 총연맹의 정치방침은 '보수 양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 분명하게 존재함. 그러나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총연맹의 정치방침이 형해화되고, 최소한의 정치방침도 어긴 채 총선 평가를 종료시키고, 대선방침을 수립하지도 못했으며, 노동과 진보정치의 자주성을 확보하기보다 보수정당에 끌려다니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결국 민주당의 하위파트너 지향하는 수준에 이름.

몇몇 노조들은 특정 정파의 당리당략, 특히 상층 독단의 결정에 따라 작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을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광장후보라는 포장 아래 이재명을 지지함. 현장의 동의도 없고, 정치방침을 스스로 거스르는 상황에, 구성원간 갈등에도 묵살로 대응함. 대선 전 해당 노조의 정치방침을 논의하던 자리에서, '우리 노조의 정치방침은 특정 당으로 귀결된다'고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상근자를 보고, 이들의 정치세력화는 특정 정당의 정치방침에 불과할 뿐 그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생각함. 해당 노조에서 진행되는 정치학교도 특정 정당의 집권전략을 강의하는 수준에 그치는 이 상황에 무엇을 더 이야기 할 수 있을지 궁금할 뿐임. 이러한 상황에 모든 노동자들의 민주노총, 150만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하나다라는 이야기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고 생각됨. 이러한 상황에 민주노총은 과연 하나인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가? 총노동을 위한 고민보다 자기 정파에 매몰된 현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자기반성이 있어야 함

토론의 부재

민주노조운동이 조합원들의 의견수렴은 커녕 어느순간 일방적으로 지침을 하달해 조합원들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음. 대의원대회에서 특정 노동조합은 ‘지금은 손은 들면 안된다’라고 노골적으로 거수기 노릇을 시키는 것을 보면 상층의 조합원들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음. 학습과 토론이 담보돼야 조합원들이 본인이 대안을 만들 수 있고, 민주노조운동의 민주주의가 강화될 것. 뿐만 아니라 학습과 토론은 구체적인 선명한 계급적 인식에서 이뤄져야 하고 이 또한 하달식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함

소수자에 대한 인식의 저조

1500만 노동자의 민주노총이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한다는 과제가 무색하게 노동 이외 다른 진영의 의제에 소홀함. 특히 장애인, 이주노동자, 여성,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나 차별이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함. 사업장 내 교육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민주노조운동 차원의 의무교육 등 프로세스로 정립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됨.

입법투쟁, 거대보수정당에 매몰된 투쟁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해 여러 관점이 있겠지만, 소속 노조는 최근 조합의 모든 역량을 대관사업에 치중하는 상황이 발생함. 입법투쟁의 의미를 괄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매몰되는 현상이 민주노조 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 비단 단위노조의 상황 뿐만 아니라 총연맹차원의 국회 주도 사회적대화 참여, 경사노위 참여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고민하게 됨. 노동이 힘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인지, 현장의 힘을 무시하는 것인지 의문만 쌓임

전망과 지향점의 부재 속 활동가의 내적 성장이 가능한가?

운동 과정에서 활동가, 조합원 스스로 갖는 자기 자신의 내적 성장은 운동을 지속가능성 할 가장 큰 자양분이 됨. 내적성장을 넘어 활동가 본인의 자기전망을 구체화하는 과정은 활동 지속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 활동가가 내적성장과 자기비전, 자기전망을 갖지 못한다면 운동의 소모품에 지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될 것이고 그러한 운동은 지속될 수 없음. 때문에 스스로의 전망과 소속 단위의 전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지금 내 조직은 나에게 믿음과 신념을 주는가? 활동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물음에 어떠한 답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함

민주노조운동이 굳건하게 서고 사회변혁의 중심이 되기 위해 어떠한 길을 세워야 하는가. 활동가 자신의 내적 성장과 분명하고 올곧은 자기전망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함. 자기전망의 확신 속에서 활동의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고 나의 운동으로까지 체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줘야 함. 전망을 통해 새로운 주체들을 형성하고 민주노조운동의 전망까지 세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함.

[특별발제]

노동청년들의 제안 "노동운동, 문화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 이슬, 민들레, 김보성 공동발제

1. 연대란 무엇인가
2. 노조문화와 당사자주의
3. 비폭력주의에 대한 단상

1. 연대란 무엇인가?

- 민들레

연대란 개별적인 사람이나 집단이 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이익·권리·가치를 지키기 위해 책임을 나누고 함께 행동하는 관계를 말한다. 연대는 단순한 동정이나 응원이 아니라, 상대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위험과 부담을 나누는 적극적인 실천이다.

윤석열 파면집회부터 이어진 연대시민의 투쟁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농성장 찾아가기, 집회참여, 선전전참가, 연대버스참가. 후원, 어려운노조에 후원 등 윤석열파면집회가 1년이 되어가며 이어지고 있다. 연대시민이 일상으로 많이들 돌아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남아 연대를 이어가는 동지들이 있다. 연대시민이였다가 노조에 가입해 노조운동으로도 이어지고도 있다. 그사이 명예노조원도 생겼다.

연대시민, 말별동지들이 생기면서 평등수칙이 생겼다.

평등수칙의 내용으로 나이, 인종, 고용형태, 가족구성,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동등한 위치에서 다같은 동지라고 부르기로 했다. 올 여름 세종호텔에서 평등수칙 중간체크를 2번 연결로 알고있다. 많은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기억난다. 호칭, 농성장에서 하는 행동,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지 등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다. 선생님은 교사로, 직책 말고 이름과 동지로, 농성장에 문제가 생기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조합원이나 공대위에게 알리기, 동지 혼자 다한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기 등 많은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여전히 평등수칙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이 나올때가 있다. 평등수칙 다시 생각해볼때가 된거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연대시민이 어디까지 해야한다고 생각하나 어느 선까지 해야 조합원 동지에게 힘이 될까? 단지 농성장 찾아가고 집회참여하고 총파업에 지지하고 작은조합에 연대하며 있는것만이 연대일까? 연대시민이 노동에역사, 투쟁의의미, 왜 투쟁하는지 공부하고 투쟁하면 안되는걸까? 연대시민에게 발언을 계속 시키고 있다. 내가 왜 개인 깃발을 들었나, 연대를 왜하나, 투쟁을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각 농성장에 투쟁을 어디까지 아는가, 발언하고 싶은

이유는 뭔가 주제로 발언을 하라고 하고 자유발언도 받고있다. 연대시민들 발언글도 쓸줄 모르는 상황에 쓰고 발언하는 상황이 이어지고도 있다. 연대동지들에게 발언글, 기고글 등 쓰는 법 알려줄 수는 없을까? 각 노조마다 발언, 기고글 쓰는 방법이 다른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윤석열파면이 1년이 되어간다. 연대시민은 어떻게 할건지, 명예노조원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한 발언, 기고글, 투쟁방법등 공부해야 연대가 지속이 될거 같다.

많은 동지들이 연대하다 쉬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러다 연대시민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소수노조는 살아남지 못한다. 소수노조, 연대발언, 연대시민의 긴 연대, 개인 기수는 차츰 줄어들다 어느 순간 발길조차 찾을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힘을 합할 때이다.

2. 노조문화와 당사자주의

- 이 슬

당사자주의란 운동이나 투쟁에서 해당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가 논의의 중심이 되고, 운동의 방향과 전략을 주도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주로 정체성 운동에서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장애인운동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과거 비장애인 중심의 시혜적 관점과 '전문가주의'에 의해 주도된 운동은 장애인의 의사와 무관한 시설 수용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당사자주의는 탈시설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며 운동의 방향을 전환시켰다. 이는 당사자주의가 비당사자의 왜곡된 시각이나 비현실적인 개입을 차단하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전면에 내세우는 긍정적 기능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노동조합 문화에서 당사자주의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장애인운동, 여성운동, 성소수자운동 등에서 당사자주의가 주로 정체성의 문제, 즉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주체성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것과 달리, 노동운동에서의 당사자주의는 현장성과 투쟁 주체의 문제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노조 문화에서는 투쟁을 진행하는 특정 사업장이나 지회가 해당 투쟁의 당사자로 규정되고, 그 외의 조직이나 개인은 연대자로 규정된다. 당사자가 투쟁의 방향과 전략, 종결시점 등을 결정하고 연대자는 그에 따르고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문화 내에서의 당사자주의다. 이는 해당 투쟁의 결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현장 주체에게 실질적인 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투쟁의 동력을 높이고, 책임 있는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당사자주의가 절대적으로 옳은 개념이라 할 수 있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와 마주한다.

우선 당사자의 범위를 정하는 데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기존 노동조합 문화에서는 특정사업장의 조합원으로 당사자가 한정되지만 노동운동의 연대적 성격이나 투쟁의 전 노동계급에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그 경계가 모호해진다. 예를 들면 A학교 투쟁이나 세종호텔 투쟁에서 해고 당사자만이 당사자여야 하나, 아니면 공대위까지 당사자로 볼 수 있나? 거통고조선하청지회에서 조선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적이 없던 조합원도 당사자로 볼 수 있나? 비정규직 투쟁에서 정규직 노동자는 당사자가 아닌 연대자로 규정되나? 당사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할 경우, 투쟁은 고립되고 광범위한 연대와 지지를 모으기

힘들어질 수 있다.

또한 연대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문제가 있다. 연대자는 당사자의 의견에 무조건 따라야 하나, 아니면 투쟁의 방향이나 수단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 이 문제를 개념적으로만 제시했을 때에는 대부분이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도 된다'라는 공통된 의견을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문제를 제기받거나 평가당하는 상황에서 보이는 태도는 다르다. 당사자의 결정에 대한 비판적 의견 제시는 종종 '당사자주의 훼손', '비당사자의 주제 넘는 개입'으로 비판받으며 갈등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논의할 때는 피상적으로 넘어가기보다는 어떻게 어디까지 연대자와 정보를 공유할지, 당사자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할 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논의에 포함시킬지, 연대자는 본인의 의견이나 맡은 역할에 어떻게 책임을 질지 등의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당사자주의는 노동운동에서 현장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비현실적인 개입을 차단하는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투쟁과 연대의 경계가 애매해지는 현대 노동운동의 조건 속에서, 당사자주의의 경직된 해석은 오히려 연대의 폭을 좁히고 전략적 사고를 제약할 수 있다. 노동조합 투쟁은 단지 한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계급 투쟁의 일환이다. 그러므로 '당사자 - 연대자'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서 당사자주의의 범위와 가치를 재정립하는 것은 노동운동에서의 중요한 과제이다.

3. 비폭력주의에 대한 단상

- 김보성

서론

운동의 비폭력주의에 대한 생각을 풀기 전에 먼저 '폭력'에 대한 생각을 풀어보고자 한다. 폭력을 정의한 뒤에 '폭력의 반대·부재·부정'을 추구하는 비폭력주의에 대해 논할 수 있으리라 본다.

본론

운동에서의 폭력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자면 '외부에서의 폭력'과 '내부에서의 폭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외부에서의 폭력은 경찰, 법원 등의 국가폭력이다. 내부에서의 폭력은 운동 과정에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문화 사이의 문제이다. 성폭력과 폭행은 이견의 여지가 적어서 논외로 한다.

언뜻 보면 폭력이라는 개념은 고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의가 점차 변하고 그 영역이 넓어지거나 흐려지기도 한다. 스토킹과 가스라이팅이 범죄 또는 부도덕으로 정의된 것이 불과 몇 년 사이의 일이다. 또한 이 두 개념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실제 사건사고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다.

국가폭력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폭력에서 오늘날 탄핵 광장에서의 폭력을 비교하면 많이 변한 것은 사실이다. 이제 경찰은 최루탄을 쓰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까지 사용하던 물대포도

이제는 등장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국가폭력은 청산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시대에 맞게 그 모습만 바뀌었을 뿐이다. 여전히 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 물리력이 발생하고, 구사대·용역에 방관하는 모습은 변함이 없다. 그저 언론에 덜 노출되고 공론화가 덜 될 뿐이다. 여전히 경찰, 구사대, 용역에게 얻어맞고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주목도는 덜하다.

12·3 쿠데타처럼 극단적인 국가폭력 상황에서도 시민들은 ‘비폭력’으로 저항했다. 윤석열은 탄핵됐지만 ‘윤이 좋아서’에 거둔 성공이었다. 윤석열이 조금이라도 더 ‘유능’했다면, 흥분한 군인이 우발적으로 발포 했다면 유혈사태는 자명했다. 만일 유혈사태까지 이어졌다면 우리의 윤 퇴진 투쟁도 폭력을 동원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 국가폭력 투쟁은 국가폭력의 수위에 따라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먼저 폭력을 내려놓으면 우리를 상대하는 국가도 수동적으로 따라와 폭력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 진정 민주주의 국가라면 국가의 폭력 수위는 국민이 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이 자신의 이해관계 또는 계급에 상관없는 투표를 지속하면서 국가폭력을 심판하는 대신 용인하는 한, 국가는 폭력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을, 대중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가? 비폭력주의는 대중을 설득하는 도구로써 가능할 것이다.

우리의 고민 반대편에는 ‘윤어게인’으로 대표되는 극우 무리가 있다. 박근혜 탄핵선고 직후 벌어진 폭력사태로 인한 사상자부터 1·19 서부지법 폭동까지, 이들의 폭력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대중은 이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들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한편 내부에서의 폭력은 어떠한가? 다양한 사람들, 노동자를 끌어 모으고 국가폭력에 맞서기 위한 내부의 모습은 어떠한가? 12·3 쿠데타 이후 광장에 모인 다양한 사람들이 ‘연대 시민’으로써 운동에 참여하며 그 모습이 많이 바뀌었다. 민중가요 대신 K-POP 등이 사용된 것이 대표적이다. 12월부터 4월까지 약 4개월여 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문화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은 분명 존재했다. 이런 갈등은 어떻게 공론화되고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그저 소문만 전해지고 소셜미디어 피드에 흘러보내는 것으로 충분한가?

갈등은 어디까지가 갈등이고 어디까지가 폭력인가?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갈등과 폭력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는 아슬아슬한 경계에 대해 우리는 어디까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결론

다만 폭력 없는 ‘무균실’은 불가능하다. 국가와 권력, 자본을 상대로 하는 ‘투쟁’은 그 자체로 싸움이고 폭력이다. 국가·권력·자본이 스스로 폭력을 내려놓지 않는 한, 국가·권력·자본에 의해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비정규직·이주노동자 등 약자·소수자가 그 위협에 더 노출되어 있는 현실 그 자체가 ‘폭력’으로 존재하는 한, 우리의 투쟁은 멈출 수 없고 멈춰서도 안 된다. 그저 그 수위와 정도를 조절해야 한다. 그래야 대중들의 지지, 더 많은 노동자의 조직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아직은 불충분하지만 민주화 이행과 그로 인한 국가폭력의 감소 역시 이러한 지지와 조직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2025년 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함께

3회 "민주주의와 노동"

1박 2일 캠프

일시 2025년 11월 29일 18시 (1박2일)

장소 서울 마리스타 교육원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전망과 미래를 어떻게 그려낼 것인가?"

1주제 민주노조운동은무엇이었는가?

2주제 민주노조운동의 길을 어떻게 열어야하는가?

올해 6기 민주주의와노동 학교 주제는 노동조합과 노동운동론입니다. 학교에서 1-3강 노동조합의 원론적인 이해부터 비판적인 문제의식까지 가다듬은 후 계급주체 형성의 문제로 진입합니다. 이를 위해 87년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성격, 현주소, 그리고 미래를 그려보는 1박2일 치열한 캠프 마당을 3강 직후 엽니다.

2025년 11월 29일	2025년 11월 30일
18시 캠프 입소 등록 18시-19시 저녁식사 및 입실 19시-22시 30분 캠프 토론회 총 2세션 진행 <small>* 각 세션 짧고 굵직한 문제제기적 발제를 듣고, 집단지성으로 치열한 '토론'을 통해 잠정적인 결론 만들기</small>	오전 9시 캠프 종합토론 캠프 해산

학교 신청서에서 함께 신청 <https://bit.ly/노동학교6기>

※ 캠프만 신청가능합니다만 전체 신청을 권합니다.



신청QR코드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